후반전 들어서는 국정감사

여야, 옥중 서신에 '라임·옵티' 2R

오늘 서울중앙·남부지검 국감
김봉현, 야당 정치인·현직검사
접대 의혹 폭로… 난타전 예고

정영채 NH투자증권 대표이사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협중앙회,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의 질의 자료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는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서신'으로 정치권 전체에 관련 의혹이 확산하면서다.

그동안 전·현직 여권 인사들이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당 대표부터 기동민·이수진(비례) 의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등이 의혹에 연루된 바 있다.

이 대표는 올해 총선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으로부터 복합기 임대료를 지급받은 의혹이 있다. 이에 이 대표 측은 '복합기는 사무실 초기 필요 때문에 참모진 지인을 통해 빌려 온 것'이라며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기 의원은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고급 양복을 받은 의혹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은 바 있다. 이 의원과 김 사무총장은 검찰 소환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로비자금 받은 의혹과 관련해 김 전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검사장 출신 야당 정치인을 통해 로비하고, 현직 검사도 접대한 내용에 대해 폭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전날(17일) 논평에서 "권력형 게이트를 외치던 국민의힘이 이번 폭로에 침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앞으로 남은 국감에서 민주당은 야권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의혹을 두고 대치할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될 전망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어 22일에는 대검찰청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는 19일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라임·옵티머스 사태 관련 수사를 서울고검 산하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서 하기 때문이다. 22일 대검찰청 국감 역시 윤 총장의 출석이 예고된 만큼 여야가 수사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이 '옥중 서신'에서 폭로한 야당 정치인 로비와 검사 접대 의혹 등을 두고 검찰에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그동안 제기한 '권력형 게이트'를 쟁점화하며 특별검사 도입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18일 논평에서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국민의 요구와 똑같다. 맑게 밝혀달라"라며 "미꾸라지 몇 마리가 검찰의 물을 흐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 걱정이라면, 특검이 있다"고 특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23일 정무위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 역시 여야가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두고 공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감에 옵티머스 사태 핵심 인사로 꼽히는 이모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돼 출석을 앞두고 있으면서다. 야당은 이 전 행정관이 국감에 출석할 경우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metroseoul.co.kr

병력부족 모병제로? 경제적 징병된다

문형철 기자의 **국방 칼럼**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른 이슈는 '모병제'다. 국군의 병력을 55만에서 50만으로 줄여도, 2032년이 되면 연간 2만 명이 부족하게 된다. 그렇지만, 모병제로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는 현제로서는 매우 힘들다. 선결과제를 먼저 풀지 않는다면 모병제 전환은 불가능에 가깝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를 묻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의 질의에 "2032년부터 연간 필요한 현역 인원이 20만 명인데 18만 명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인원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만 18세 이상 복수국적자의 한국 국적 이탈을 제한한 법안도 위헌 결정이 나면서 최근 5년간 국적이탈자의 다수는 병역자원이 될 10대와 30세까지의 청년층이었다. 올해 국정감사에 오른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5~2020년 복수국적자 1만3433명이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11~20세가 83.7%로 가장 많았고, 이어▲0~10세 10.5%▲21~30세 5.4%▲31세 이상 0.3% 순으로 집계됐다.

인구절벽은 앞으로 더 가속화 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인데, 그렇다면 징병제를 통한 병력확보는 더욱 어려지게 될 것 이다. 이미 2013년 대한민국의 징병율은 91%에 달했다. 2차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최고징집률 은 77.4%, 징집대상 2780만명 중 2200만명을 동원했던 독일(당시 인구8000만)의 징집률 78%보다 훨씬 높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최저시급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로 국방과 대민지원 등 다양한 임무로 청년들을 착취하고 있다. 징병제가 한계에 봉착한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모병제로 전환한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낭만적 낙관론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솔직히 말하자면, 가진 것 없는 자들에게 위험을 떠맡기는 '경제적 징병'으로 변질 될 것이다.

중화민국(대만)의 경우 군내 부조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기간을 점차 단축하다 2018년 12월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했다. 공무원에 준하는 급여 수준이지만, 국방 예산 부족과 병력 인원 확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같은해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한 스웨덴의 경우 최근 인력 수급을 이유로 다시 징병제 재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징병제를 폐지한 후 첫해부터 5400명을 모병 목표로 했지만 지원자는 24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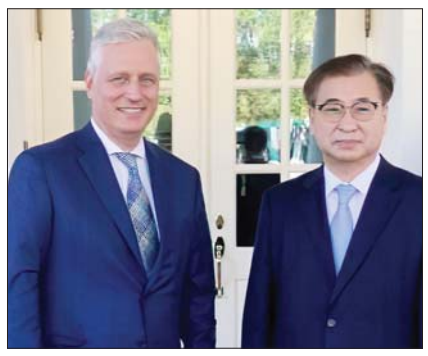
스웨덴은 왕족을 비롯한 상류층이 자원입대를 하는 노블레스 오블레쥬가 정착된 나라임에도 지원자 수가 작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떨까?

상류층 인사와 그 자제들의 병역 이행률이 현격하게 높지도 않다. 군복무의 가치보다 정치적 해석이 먼저다. 무기 살 돈과 대민지원 보낼 여유는 있어도 시간외 수당과 개인 전투장비 및 기타 후생복지에 대한 지원은 박하다. 강한 군대가 되기위한 기본은 급여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존중과 배려다. 강한군대가 되면 시민들은 군인들을 자연스레 존중한다.

개인과 사회을 위해 가고싶은 군대로 변신하지 못한다면, 군인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해 돈을 벌기 위해 흘러들어간 낙오된 노동력으로 치부될 것이다. 이것이 경제적 징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captinm@

靑 "오브라이언 美 NSC보좌관 내달 방한"

서훈 국가안보실장에 약속
일정은 내달 대선 이후 유력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오른쪽)과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1월 중' 한국에 방문할 의사를 전달한 사실에 대해 밝혔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13~16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오브라이언 NSC보좌관과 만나 면담한 이후 성사된 일정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서훈 안보실장은 (미국 방문 일정 중) 오브라이언 NSC보좌관의 방한을 요청했고, 오브라이언은 11월 중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서훈 안보실장에게 밝혔다"고 전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오브라이언 NSC보좌관 방한과 관련해 11월 중 미국 대선 일정과 관련 있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가운데 "오브라이언 보좌관이 방한하겠다는 입장을 서 실장에게 밝혔고, 여러 사정을 봐야겠지만 (미) 대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까 (오브라이언 보좌관 방한) 날짜는 11월 중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한국 방문 일정과 관련해 "아직은 알릴 게 없다"고 전했다. /최영훈 기자

"가금농가, AI방역 어기면 6개월 사육제한"

농식품부, 개선 전까지 입식 금지

해외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을 위한 조치를 어기는 가금 농가에 6개월간 사육 제한 명령이 내려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증가에 따라 올해 겨울철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선제적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달 6일까지 전 세계 AI 발생은 586건으로 전년(202건) 대비 2.9배 증가했고,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5건), 대만(84), 러시아(60), 베트남(63), 필리핀(3)에서 지속 발생 중이다.

국내에선 저병원성 AI(H9N2형)가 상시 예찰·검사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전통시장 내 가금판매소와 이곳에 가금을 공급한 계류장과 농장에서 지속 검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방역의 기본은 사전예방이며, 사전예방을 위해 농장 사육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 농장 차단 방역과 현장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는 소독·방역시설 등 중요한 방역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6개월 범위내에서 사육 제한 명령을 내리고 개선될 때까지 입식을 금지할 계획이다. /한용수 기자

베트남에 '한국형 스마트팜' 만든다

농식품부, 컨소시엄 공모

농림축산식품부는 베트남에 우리 기술로 만든 스마트팜 조성을 추진하기 위해 '스마트팜 패키지 수출 활성화' 사업대상자(베트남)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수출 유망국가(2개국)에 수출 거점 조성을 위해 스마트팜 컨소시엄이 시범(데모)온실을 조성·운영하는 사업이다. 공모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실시공·설계, 기자재, 시설자재, 운영 등 각 분야의 전문기업들로 컨소시엄을 우선 구성하고, 사업 기본구상, 시범온실 조성 및 운영계획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해 11월 13일까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하 실용화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

산업인력공단 공정 채용 우수사례 대회 개최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의 공정 채용 우수 사례를 공모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공정한 선발과정을 통해 채용을 실시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민간기업 등 모두 지원할 수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블라인드 채용 등의 운영 현황 등을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용수 기자